

제 안 설 명 서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 준치 건의안】

박찬훈의원 외 13명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 존치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3. .

제 출 자 : 박찬훈의원외 명

1. 주문

-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의 통폐합을 반대하고 의회차원에서 영주시에 존치를 건의하기 위한 건의문 채택

2. 제안이유

-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을 통폐합 할 경우 영주지청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
- 인구, 근로자수 등 모든 면에서 규모가 큰 영주지청이 안동지청에 흡수통합 되는 것은 불합리 함
- 대부분이 2차산업 생산직인 영주지청 관할 근로자의 구성으로 볼 때 노사분규가 많이 발생해 왔고 앞으로 발생가능성이 더 높음
- 북부지역 최대의 공업지역이고, 한국노총 경북본부 북부지부가 있으며, 철도공사 경북북부지사가 소재하여 노동행정 수요가 그 어느 곳 보다 많음
-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영주존치를 건의함

3. 기타사항

- 결의안 송부처
 -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노동부장관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 존치 건의문(안)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경제 안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명박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그리고 장관님들과 관제공무원의 노고에 충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영주시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지역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주시는 물론 모든 시민들과 협력하여 민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노동부의 지방노동관서 통폐합 계획에 의한 영주지청의 안동지청으로의 흡수 통합안에 대해 당혹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누구를 위한 통폐합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은 영주시를 비롯하여 상주시, 문경시와 봉화군 등 3개시 1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근로자 4만 4천여 명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만약 영주지청이 폐쇄되어 인근 안동지청으로 흡수된다면 영주지청을 이용하는 4만 4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감당하게 될 비용지출과 불편은 계산해 보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할구역 내 인구수에 있어 영주지청은 329,425명인 반면, 안동지청은 321,381명으로 영주지청 관할이 많고, 행정대상 근로자 수도 영주지청이 43,917명이나 안동지청은 43,743명으로 어느 면으로 보나 영주지청이 안동지청에 흡수 통합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해명에 따르면 안동이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로서 지리적 분포를 감안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청이전 예정지는 안동이 아니라 영주, 안동, 예천 3개 시군의 접경지역에 신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며 지리적으로도 도청이전 예정지에서의 거리가 서로 비슷한 상황을 감안하면 노동부의 의견은 현실을 외면한 억지 발상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영주시에는 동양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KT&G 연초제조창, 다국적 기업인 노벨리스코리아, 첨단반도체 세정용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소디프신소재 등 대기업이 많이 있어, 영주지청에서 관할하는 제조업체 388개에 종사 근로자 8,085명인 반면 안동지청 관할 제조업체는 273개에 근로자 4,236명이라는 숫자에서 보듯이, 영주지청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가 생산직인 2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주로 서비스 부문인 3차산업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안동지청 관할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노동분쟁이 더 많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불을 보듯 명확한 사실임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주시는 농공단지 6개, 일반산업단지 1개 등이 조성되어 있고 새로이 농공단지 3개를 개발 중에 있어 경북 북부지역 최대의 공업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경북북부 지역 11개 시군을 관할하는 한국노총 경북본부 북부지부가 영주에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경북선·영동선이 교차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철도공사 경북북부지사가 소재하고 있어 철도 노조원들의 잦은 노동쟁의의 집결지이기도 하여 수준 높은 노동행정이 그 어느 곳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님, 장관님!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도 지역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디 영주지청을 우리 지역에 계속 존치토록 하시어 영주, 상주, 문경, 예천지역 주민들의 사기를 북돋우어 주시고 오로지 국가와 지역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영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충심으로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9. 3. 23.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의원일동